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021.5.21(금) ~ 22(토) | www.dmzforum.or.kr

[평화운동 협력세션 I-3 : DMZ 접경지역의 평화와 번영 및 활성화 방안]

최나래 평화공공외교협력단

5월 21일 15시 10분에 열린 평화운동 협력세션 I-3은 'DMZ 접경지역의 평화와 번영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정전체제의 유산으로 단절과 배격의 공간이었던 DMZ를 평화지대화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극복 방안과 실천 방안들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좌장을 담당했다. 그리고 이재준 고양시장,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유재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이 발제를 담당하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가 2019년 남북표준시범도시 방안 연구, 2021년 2월에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와 함께 개성일일관광을 추진하는 등 지방정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평화의료센터 구축, 의학 언어 공유, 평화의료클러스터 등 의료 분야를 함께 공유하면 평화외교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정부가 획일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지방정부가 따르는 것이 아닌, 각 기초단체를 활용하여 복합적인 채널을 운영하여 신뢰 및 가능성을 견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포괄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안목이 필요하므로 북부(고양, 김포, 파주 등) 도시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으로 지방 단체를 통해 북측과의 교류가 성립되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꾸준히 강조하였다.

서보혁 연구의원은 2019년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여파로 평화지대화 합의 이행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향후 남북한 지속가능한 군사협력을 위해 주요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군사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DMZ 공동유해발굴사업, JSA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9년 하노미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중단되었고, 이는 남북군사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설상가상으로 국민 대상으로 통일 의식 조사를 한 결과, 2기보다 3기 민주정부 시기에 통일에 대한 지지율이 더 낮아졌다. 따라서 서보혁 연구의원은 국민이 통일 중심에서 평화 중심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남북 평화체제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DMZ 평화지대화를 논의할 때 미국 및 유엔사의 협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DMZ에 관련된 사안은 미국과 유엔사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유엔 사령부는 정전협정의 궁극적 목적과 한미 동맹관계를 감안해 민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을 역설했다.

그리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한반도 정세 개선 과정

에서는 종전선언만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북미 간 적대관계 완화 및 신뢰조성, 북핵 협상 촉진, 남북관계 발전 등 다차원에서 논의된다면 국제사회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마무리했다.

민경태 국립통일연구원 교수는 DMZ 접경지역의 개발에 대해 개발론자와 생태론자의 논쟁이 활발하지만, 실상은 논쟁할 필요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동부의 산악지대는 울창한 살림이 밀집되어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대인 반면, DMZ 내부는 군의 경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목을 제거하고 있으며 서부 임진강 한강하구는 DMZ가 없는 공동이용 수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막대한 지리 제거 비용 문제로 인해 대규모 개발을 하기에는 경제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배후 접경 지역을 위주로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태 교수는 DMZ 접경지역의 개발 방향에 대해 세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DMZ 내부 지역은 매우 제한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배후 도시가 없는 곳에서 DMZ 개발은 부적절하므로 교통망 통과 지점 및 특별 구역에 국한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배후 접경지역은 교통과 물류 중심으로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접경지역 전체보다는 남북 연결 거점 도시 중심으로 개발하여, 제조업 위주의 특구를 개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부와 중동부 지역의 지리 환경적 차이를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서부는 교통·물류·무역 중심 산업을 육성하고, 중동부 접경지역은 생태·관광·휴양 중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민경태 교수는 접경지역의 개발을 '세포가 융합되는 과정'으로 비유하였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해 접경지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한다면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되고,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서 결국에는 제도·정치적 통합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유재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은 DMZ 일원을 개발하려는 183개의 정책들이 접경지역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개발에만 치중된 DMZ 평화지대화 계획에 비판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최근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이후의 문화변동으로 인해 MZ 세대는 환경 문제를 사회정의나 공정의 문화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를 남북한 문제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콰도르와 페루의 접경지역 등을 글로벌 접경지역 평화공원 사례로 제시하며 'DMZ생태평화공원' 추진은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생태기반 해법과 '소소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전환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DMZ생태평화공원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거버넌스사업'이란 각 지역 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수용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며, 남북이 역사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사업 발굴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DMZ와 관련된 사항은 장기간의 조정과 합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DMZ에 관한 미래형 개발은 미래세대가 주도할 수 있도록 남겨두었으면 좋겠다."며 발제를 마쳤다.

토론은 유재심 연구원의 발제에 대한 민경태 교수의 답변으로 시작되었다. 민경태 교수는 기존 도시 지역들을 연결하는 교통망 및 물류 핵심 시설들은 보존해야 할 지역 바깥에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동해선은 이미 연결이 시작되었으며, 경원선이 지나는 주요 거점지역의 개발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DMZ를 개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유재심 연구원의 '보존'이라는 큰 틀은 존중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물류 중심의 개발은 이에 큰 대치가 없다며 반박했다.

이에 유재심 연구원은 "개발을 지양하는 것이 아니며, 생태계를 현명하게 이용하자는 측에서 보전하자는 쪽이다. 평화는 개발이라고 인식될 만큼 너무 많은 개발 사업을 챙길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가 대북산업 사전승인제에 지침을 내렸으면 좋겠다. 개성공단 재개 방안 또한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평화통일의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서보혁 연구의원은 "중단되어 있는 비핵화 프로세스가 재개되어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종전선언 등이 접경지역에서 가능한 추진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통일의 장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좌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북미 이산가족 간의 상봉 등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이 발의되었고, 173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오늘의 발제가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남북 모두의 문제에 잘 어울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세션을 마쳤다.